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376
----------	-------

발의연월일 : 2025. 5. 2.

발 의 자 : 조지연·배준영·박준태  
구자근·박덕흠·최수진  
장동혁·박충권·고동진  
김승수·서명옥·조배숙  
조은희·김예지·김장겸  
이성권·임이자·이종욱  
김소희·강대식·우재준  
이양수·김형동·김용태  
김위상·이인선·김재섭  
서범수·김종양·서지영  
박성훈·김대식·강명구  
의원(3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과거사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진실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나,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위령사업과 사료관 관리를 위해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념 및 추모사업 추진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 국가의 기념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 신설,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보상 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 중 “화해를”을 “화해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실규명결정 사건”이란 제3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제2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을 말한다.
2.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 제34조의2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  
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가.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상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다.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상이를 입은 사람
  - 라.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사람

3. “유족”이란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25조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34조 중 “및”을 “보상 및”으로 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및 제3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 ①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의 확인 및 그 유족 해당 여부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2.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및 그 유족 보상금의 심의·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
3.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중 상이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

항

4. 그 밖에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보상 원칙)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의4(보상금) ①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34조의5(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제26조의 진실규명결정을 제28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의 시행일(법률 제00000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0000년 0월 0일을 말한다)로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6(보상금의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34조의7(결정서정본 송달)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의8(재심의)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34조의6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제34조의7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34조의6 및 제34

조의7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34조의6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34조의9(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① 제34조의7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10(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34조의11(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의12(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6에 따른 결정기한이 지나도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4조의1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14(보상금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4조의15(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의16(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9조의2(기념·추모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실규명결정 사건을 기억하고 그 희생자 및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기념·추모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추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 중 “위원회 위원”을 “위원회 또는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 위원회”를 “, 위원회등”으로, “, 위원회의”를 “, 위원회등의”로, “참여하거나 위원회의”를 “참여하거나 위원

회등의”로, “관계자는 위원회의”를 “관계자는 위원회등의”로, “밖에 위원회의”를 “밖에 위원회등의”로 한다.

제42조 중 “위원회의”를 각각 “위원회등의”로 한다.

제43조 중 “위원회가”를 “위원회등이”로, “진실화해위원회”를 “진실화해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4조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등의”로 한다.

제4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위원회의”를 각각 “위원회등의”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경우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보상 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보상 기본법」”으로 한다.

②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보상 기본법」”으로 한다.

③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보상 기본법」”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u></p> <p style="text-align: center;"><u>기본법</u></p> <p>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 학살 ·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u>화해</u>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lt;신 설&gt;</u></p>	<p><u>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u></p> <p style="text-align: center;"><u>및 보상 기본법</u></p> <p>제1조(목적) ----- ----- ----- ----- ----- -----<u>화해와 그</u> <u>피해에 대한 보상을</u>----- ----- -----.</p> <p>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진실규명결정 사건”이란 제3조에 따른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제2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을 말한다.</p> <p>2.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34조의2</p>

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  
람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상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다.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상이를 입은 사람

라.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사  
람

3. “유족”이란 진실규명결정 사  
건으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  
으로 인정된 사람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  
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  
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  
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  
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  
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

제25조(조사기간)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34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25조(조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2년-----  
-----  
-----.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국가의 의무) -----  
-----보상  
및-----  
-----  
-----  
-----  
-----  
-----.

제34조의2(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 ①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의 확인 및 그 유족 해당 여부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2.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및 그 유족 보상금의 심의·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

3.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중 상이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



<신 설>

<신 설>

<신 설>

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보상 원칙)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의4(보상금) ①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34조의5(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또

<신 설>

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  
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  
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  
급신청은 제26조의 진실규명결  
정을 제28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  
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  
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의 시  
행일(법률 제00000호 진실·화  
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0000  
년 0월 0일을 말한다)로부터 2  
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6(보상금의 결정) 보상심  
의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  
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  
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신 설>

<신 설>

<신 설>

한다.

제34조의7(결정서정본 송달)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의8(재심의) ① 보상심의위

원회가 제34조의6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제34조의7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과 송달에 관하여는 제34조의6 및 제34조의7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34조의6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34조의9(신청인의 동의와 보상

금의 지급) ① 제34조의7에 따

	<p><u>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u></p> <p><u>②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lt;신 설&gt;</u></p>	<p><u>제34조의10(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u></p>
<p><u>&lt;신 설&gt;</u></p>	<p><u>제34조의11(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p>
<p><u>&lt;신 설&gt;</u></p>	<p><u>제34조의12(결정 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6에 따른 결정기한이 지나도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4조의1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 설>

<신 설>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  
만,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  
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  
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34조의14(보상금의 환수) ① 국  
가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  
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  
우

2.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  
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  
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  
수의 예에 따른다.

제34조의15(사실조사 및 협조의

<신 설>

<신 설>

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 취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하 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 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 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 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의16(소멸시효) 이 법에 따 른 보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9조의2(기념·추모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실규명결정 사건을 기억하고 그 희생자 및 피해자를 추모하





<p><u>위원회의</u>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u>위원회의</u>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p>	<p><u>위원회등의</u>----- ----- -----<u>위원회등의</u>----- -----.</p>
<p>제4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u>위원회</u>가 아닌 자는 <u>진실화해위원회</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p>	<p>제4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u>위원회등</u>이-----<u>진실화해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u>----- ----- -----.</p>
<p>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u>위원회의</u>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p>	<p>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u>위원회등의</u> <u>의</u>----- ----- -----.</p>
<p>제45조(벌칙) ① . 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u>위원회의</u>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u>위원회의</u>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p>	<p>제45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u>위원회등의</u>----- ----- -----<u>위원회등의</u>----- -----</p>

2.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u>위원회의</u> 권한을 행사한 자	2. ----- ----- <u>위</u> <u>원회등의</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